

보도자료

보도일시	2020년 5월 28일(목) 조간
담당자	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(044-550-1125, wlim@kdischool.ac.kr)
배포일시	2020년 5월 27일(수) 09:00
배포부서	KDI 홍보팀(044-550-4030, press@kdi.re.kr)

한국의 여론양극화 양상과 기제에 관한 연구

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,
이창근 연세대 교수, 정세은 인하대 교수, 최동욱 상명대 교수

❖ 본 보도자료는 KDI 연구보고서(2019-03) 「한국의 여론양극화 양상과 기제에 관한 연구」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.

- 한국은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함께 민주화를 이룬 우수사례로 손꼽히지만, 최근 몇 년 사이에 진보와 보수 진영 간 갈등이 심화되며 여론양극화와 정치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짐.
- 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 토론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나, 여론 지형이 양극화되어 이념 성향이나 의견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의사결정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이 심화될 우려

- 여론지형이 양극화되는 상황에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정치인들이 개별 사안의 합리성이나 타당성보다는 진영 논리에 기초하여 본인의 입장을 정하고 정치적 투쟁을 할 경우 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우려
-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전통적인 방식의 설문 조사와 더불어 실험과 빅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여론양극화 양상과 기제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
 - 본 연구에서 여론양극화는 ‘의견 분포상 양극단에 가까운 의견이 호각을 이루며 전체 분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’으로 정의
 - 특히 여론양극화는 성별, 인종, 종교, 지역, 소득 등 사회경제적 특성에 기초한 집단양극화와 연계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증폭
 - 기존 연구에서는 엘리트(정치인) 양극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지만,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, 즉 유권자 양극화에 초점을 맞춤.
 - 한국의 엘리트 양극화 지수(0~2)는 17대 국회(2004.4-2008.4) 때 0.7에서 20대 국회 전반(2016.4-2018.5) 0.9로 증가(한규섭 외(2018))
 - * 경제 등 어떤 사안에 대해 가장 진보적 입장을 -1, 가장 보수적 입장을 +1로 할 때, 엘리트 양극화 지수는 양대 정당 간 평균 입장의 차이로 계산
- 한국의 여론양극화 양상과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「세계가치관조사(World Values Survey: WVS)」와 「한국종합사회조사(Korean General Social Survey: KGSS)」자료를 이용해 유권자의 이념성향 분포 변화를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, 여론양극화가 진행되었다고 보긴 어려움.
 - 완전 중립 입장을 기준으로 이념 성향이나 의견의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음.
 - 다만, 이념 성향 분포상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에 현실정치와 온라인의 여론형성 활동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.

-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이들의 여론형성 활동과 정치 참여에서 기인할 수 있는 만큼, 양극단의 의견이나 입장이 정치 과정에서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하고, 정보 왜곡과 편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

□ 2018년 12월 일반 국민 1,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실험 연구 결과에서도 이념 성향이나 의견의 격차에 따른 여론양극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, 인구통계 특성 및 내재적 선호가 이념 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

- 응답자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이념 성향에서 '중도(5점)'는 45%에 달했고, 양극단인 '매우 진보(0점)'와 '매우 보수(10점)'는 각각 3%도 되지 않았음.
- 통일·외교·안보, 조세·재정·복지, 경쟁·규제, 차별 철폐 등과 관련된 25개의 정책 문항에 대한 개별 응답자의 응답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, 응답자의 3분의 2가 '다소 진보(4점)'와 '다소 보수(6점)' 사이에 분포
- 정치 성향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면, 불평등에 대한 기피 성향이 높을 수록 진보 성향을 보이고, 경쟁을 선호할수록 보수 성향을 보임.
- 인구통계 특성별로는 남성은 여성보다, 고령층은 저연령층보다 자신의 보수성을 과대 추정하는 경향

□ 여론양극화 기제 중 정보 편중 현상에 초점을 맞춰 인터넷 미디어(SNS와 인터넷 뉴스매체)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, 인터넷 미디어가 사용하는 표현은 편향성이 높으며, 이용자의 이념 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

- 인터넷 매체의 표현이 가지는 편향성을 분석한 결과, SNS의 경우 국회의원보다도 편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
- 미디어 패널 자료(2012~16년)를 분석한 결과, SNS에 노출된 이용자는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해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, 인터넷 뉴스매체에 노출된 이용자는 더 보수적인 방향으로 이념 성향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남.

- 특히 뉴스를 선호하지 않는 집단이 뉴스를 선호하는 집단에 비해 이념 성향 변화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.

○ 매체가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하고, 같은 이념성향을 가진 이용자가 동일 매체를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집단화될수록 여론양극화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

□ 여론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집단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예방하고, 의견 분포상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과 매체의 의견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

○ 성별, 인종, 종교, 지역, 소득 등 사회경제적 특성에 기초하여 배타적 정체성이 형성될 경우 집단양극화와 여론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, 차별을 금지하고 포용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정책을 마련하고,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도록 노력할 필요

○ 정치인이 극단적 지지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전체 유권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선거와 정치자금 모금 방식을 개선

- 다양한 성향과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유권자가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, 사표방지를 위해 유권자가 선호하는 순서대로 후보자를 표기하는 즉석 결선투표제의 도입을 고려

- 정당 국고보조금을 배분할 때 일정 부분을 소액 다수 기부금 총액과 매칭함으로써, 정당이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

○ 집단양극화와 여론양극화를 부추기는 허위정보에 대응하고 정보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미디어 대책을 마련하고, 무분별한 정보 전파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시민교육을 강화할 필요

❖ **별첨. KDI 연구보고서 「한국의 여론양극화 양상과 기제에 관한 연구」**